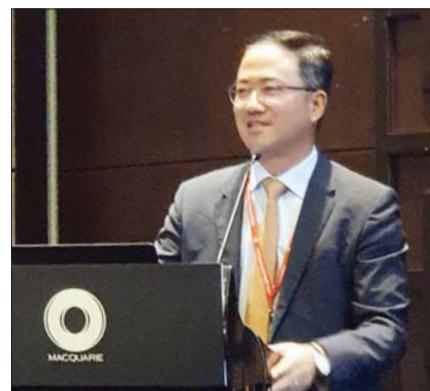


“지금은 주식 살 때”… 맥쿼리證, ‘경기저점 통과중’ 예측

“사이클상 4분기엔 바닥 확인할 것”
저금리 기조 따라 배당주, 좋은 투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株 주목



황찬영 맥쿼리증권 한국 대표이사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 맥쿼리코리아 데이'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서 한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둔화 국면에 놓여 있었으나 경기 순환 주기(사이클)상 올해 4분기에는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변수 측면에서도 앞선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리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무역분쟁에 따른 우려는 완화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경기민감주(씨크리컬) 등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배당주 역시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 분석이다.

황 대표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섹터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경기가 바닥인 만큼 경기민감주도 좋다”고 말했다. 경기민감주 중에서는 2011년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을 매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돈을 잘 버는 배당주’도 추천했다.

◆ 구조적 요인 악화, 디플레이션 시작

다만 황 대표는 “경기 순환에 따른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얼마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マイ너스로 가면서 이른바 ‘D의 공포’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유가를 제외한 균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CPI는 5년간 지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한국의 디플레이션은 어느정도 시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출하 대비 재고량이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면서 “때문에 가동률과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역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했다.

이날 래리 후 맥쿼리증권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기전망’

에 관한 발표에서 “내년 1~2분기 사이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경기 다운사이클(하방 주기) 종료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앞서 제시한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6%대 성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규모 경기 부양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나타난 경기둔화 주기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과 2014년 발생한 두 차례의 다운사이클은 모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종료됐다”고 분석했다.

비터 슈베츠 맥쿼리증권 아시아주식 전략 수석책임자는 ‘글로벌 경기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힘입어 어느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정책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이주열 총재, 세계 경제·금융시장 상황 논의



또 BIS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도 참석한다.

한편 이 총재는 8일 출국해 13일 귀국 할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89@

보험사기 피해자에 14억 환급

금감원, 최대 환급보험료 530만원
2006년부터 보험료 환급제도 운영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돌려준 보험료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7일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등이다.

환급절차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환급대상자료를 송부하고,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식이다.

또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의 심의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잡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정체성 잃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급감

기업 “상장 이점 없어… 차별 필요”
거래소 “순기능 더 많아, 개선 중”

“코넥스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가 한 주도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최근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앞둔 한 최고재무관리자(CFO)의 말이다. 코넥스 시장을 향한 기업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기술특례 제도, 테슬라 요건 상장제도 등 코스닥 시장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며 코넥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코넥스 시장에 독자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 숙제가 던져졌다.

벤처·중소기업들의 전용시장으로 평가되는 코넥스는 2013년 7월 개장했다.

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코스닥 이전을 위한 예비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무 규모가 작아도 코스닥으로 바로 향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등 비재무 지표를 우선시 하는 기술특례 제도 등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마친 기업은 14곳이다. 상장이 승인돼 공모가 진행 중인 기업도 8개다. 지난달 24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리메드처럼 테슬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도 생겨났다.

반면 코넥스에 들어오는 기업은 급격히 줄었다. 최근 코넥스 신규상장사 추

이를 살펴보면 2016년 50개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18년 21곳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단 9곳 상장에 그쳤다. 여기에 소프트캠프, 메디젠틱먼케어 등 여러 코넥스 상장 기업도 코스닥 이전으로 체급을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코넥스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각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 선임연구원은 “코넥스에 상장했을 때 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지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특장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거래소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이근영 거래소 코넥스 시장부장은 “공모를 하지 않아도 사모로 자금 조달도되고 신용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손병두 “디지털 금융혁신 위해 금융보안 필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사, 핀테크 기업 책임성 강조
“사고 발생시 금융시스템 안정성 우려”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정보보호·보안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9’에 참여해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손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이 새로운 금융리스크를 가져오지 않는지 금융안정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서비스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금융의 제3자에 대한 의존이 심화돼 금융부문이 비금융부문의 리스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네트워크 연결성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성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불법 자금이체 등 금융보안 관련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국민의 재산상피해에 이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금융보안이

/나유리 기자 yul115@

